

#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교육?

헤게모니 경쟁과 식민지조선의 교육체제

**Education as an instrument of colonial rule?**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Colonial Korea**



정준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5.08.23

## ‘식민국가 colonial state’라는 개념, 그 말하기의 어려움

일제강점 혹은 식민통치가 아니라 ‘식민국가’로 보는 관점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복잡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식민통치의 ‘사실상 인정’으로 이해

→‘식민국가’라는 용어 사용 그 자체에 대한 기피로 이어지는 상황

식민통치의 상태가 가지는 불법성, 강압적 성격, 비정상성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필요!

→ 하지만, 식민통치의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억압 vs.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선형적으로 적용하게 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

식민통치의 작동방식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당시 식민지 지배자 측이 표방했던 ‘국가성 statehood’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고 관련해서 비판적인 분석이 요청.



## 식민지적 수행주체들 colonial agencies과 각축장으로서 식민국가

게다가 '식민국가'라는 관점은, 그 작동방식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 균열들,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활동의 자유도를 추구하며, 체계의 균열과 저항이라는 임무를 결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피식민자를 포함하는 식민지적인 수행주체들 colonial agencies의 실천 및 그 실천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짐**

- 지배의 다양한 차원/ '순응 아니면 저항'의 단순 도식을 넘어서는 행위자들의 발견
- 식민국가에 대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항들의 '보다 폭넓은' 가능성들
- 식민이후 post-colonial에도 지속되는 식민국가의 효과와 그 극복이라는 과제



## 동화주의 同化主義와 정책수단으로서 교육

- 그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것이 식민지교육 colonial education의 문제
- 일본의 식민주의는 현지 주민의 ‘일본인화’를 강력하게 추구했는데, 이런 동화주의 원칙을 달성하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교육’을 중시
  -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의 실시,  
일본어 중심 및 일본 신민 臣民으로서의 충성과 덕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학교의 자격, 교원, 교과과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등
- 따라서 식민지에서 제도권 교육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비판의 대상
  - 정신적 지배의 수단, 주입과 세뇌
  - 反민족적, 反민주적, 그 자체가 反교육적



## 동상이몽 同床異夢의 장場, 식민지교육체제

- 그런데 식민지교육의 문제를 ‘교육 받는 자=지배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 과연 일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교육이 효과적이기만 했을까?
  - 학교에의 거부, 교육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기피는?
  - 심지어 교육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는?
  - 그리고 그런 한계를 모르지 않았을 식민정책 집행자들의 속내는?
- 결국 ‘식민지교육’이란, 이를 통해 관련된 행위주체 혹은 수행주체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 同床異夢의 장場’으로서 식민지교육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 따라서 식민지교육은 교육정책사 혹은 학교제도사의 측면을 넘어서, 식민국가의 작동 방식과 긴밀하게 관련 → 식민지 헤게모니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교육정책’



## 헤게모니 없는 지배와 식민지 헤게모니 프로젝트?

- 라나지트 구하Ranjit Guha :

Dominance without Hegemony 혹은 식민지에서 헤게모니적 지배의 불가능성

→ 그런데, 이것은 호미 바바Homi Bhabha의 이론을 빌자면, 피식민자에 의한 식민자의 모방 mimicry이라는 것이, 실은 식민자의 의도와는 달리, 끊임없이 “미끄러짐, 과잉, 차이” 등등 역설적인 효과를 낳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애초 식민권력이 ‘동의’를 구하는 통치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식민국가는 지배의 안정적인 재생산 및 통치 비용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민지 헤게모니를 획득하고자 시도. 그리고 이러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식민권력은 피식민자들에게 자신을 ‘국가’로서 드러내고자 함. (그 성공여부와는 별개)

- 따라서 식민지 헤게모니가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지배형태로 완전한 동의도 완전한 강제도 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식민지의 권력관계는 늘 양가적이고 불안정하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순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은 이러한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수행 속에서 드러남.



#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식민지교육정책(1)

- 식민지 헤게모니를 위한 조선총독부의 프로젝트, 그 독특한 조건들

## 1) 동화주의의 딜레마 (불가능한 목표?)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따른 잠정적인 차별?

식민권력이 동화주의를 표방한다는 것 = 자기 소멸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식민권력

→ 식민권력은 스스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끊임 없이 유예될 수 밖에 없는 목표 / 자의적일 수 밖에 없는 기준



##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식민지교육정책(2)

- 식민지 헤게모니를 위한 조선총독부의 프로젝트, 그 독특한 조건들

### 2) 식민권력의 이니셔티브?

공격적인 교육정책의 내용 **but**, 실제 교육정책의 집행에서 보여주는 소극성

→ 헤게모니 프로젝트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통치효율과 비용의 경제에 해당하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행은 오히려 식민지 민간사회의 도전이 거세어 지고,  
식민지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졌을 때만,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 식민지사회의 도전과 이로 인한 헤게모니 경쟁이 거세어 질 때,  
비로소 식민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본격화된다.



##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식민지교육정책(3)

### 3) 헤게모니 전략의 변화와 그 역동성

‘동화’라는 불가능한 목표 + 식민지사회의 도전에 직면해서만 실행되는 수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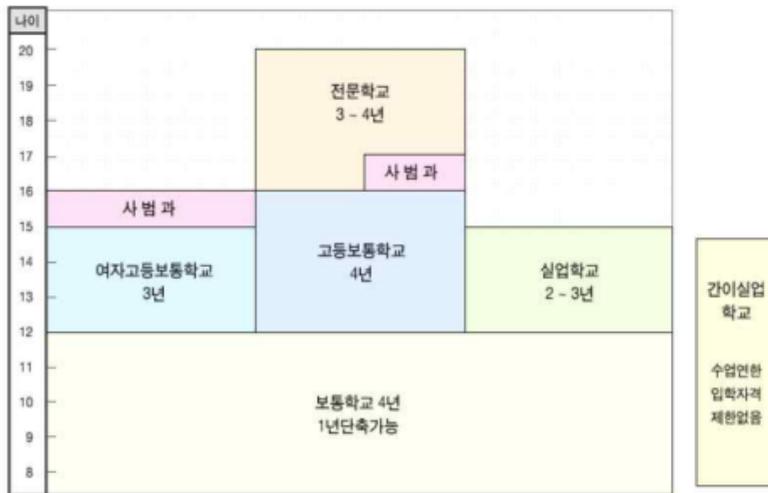
→ 따라서 프로젝트의 헤게모니 전략은 식민국가의 전반적인 유지/재생산 방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며, 그 시기적 변화와 조응 한다.

◦ 같은 개념이나 정책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사회적 효과들

기간	시기적 특징	헤게모니 전략	교육정책	대학정책
1910~ 1919	寺内正毅 '무단통치'	헤게모니 기획의 부재: 표면적 동화/실질적 차별화	'簡易·實用정책'	고등교육억압
1919~ 1930	齋藤実 '문화정치'	헤게모니 기획(Ⅰ):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헤게모니의 추구	'내지준거주의'	대학설립 적극적 지원
1930~ 1936	宇垣一成 '내선융합'	헤게모니 기획(Ⅱ): 자본주의적 시장통합을 통한 헤게모니 의 추구	기초교육의 확산 노동자형 인간의 양성	소극적 지원
1936~ 1945	南次郎~ '황국신민화'	헤게모니 전략의 포기: 강제적 동화	황국신민의 양성 병사형 인간의 양 성	대학탄압 도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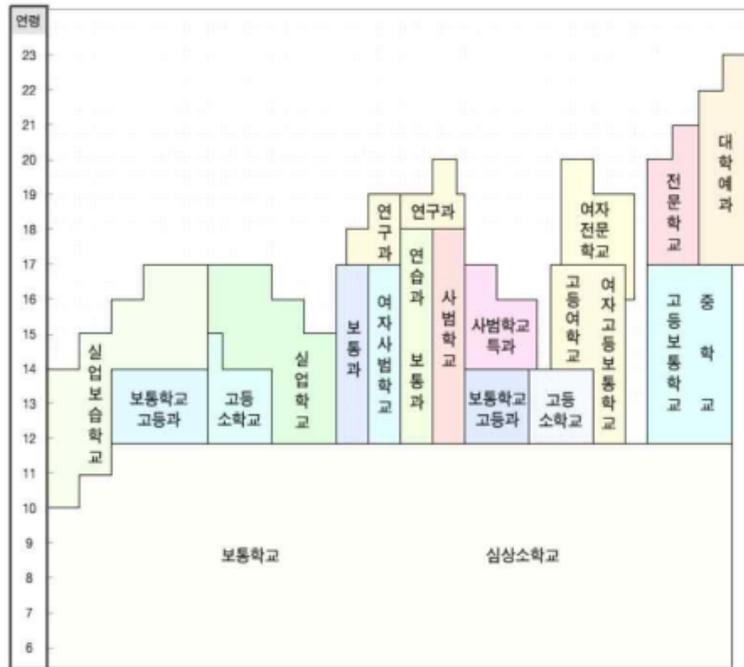
# 1910년대 무단통치,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부재

-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의 시대
-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 분리
- 간이, 실용의 원칙: 초등교육 4년 + 실업교육 장려
- 진학교육 및 해외유학의 억제, 고등교육 억압
- 식민지사회의 강력한 요구, 1915년부터 전문교육 허용
- 동화주의의 강력한 표명 → 하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인 교육차별 (헤게모니 프로젝트 자체의 부재)
- 현지인 지식계급의 강력한 불만 → 3.1운동(심각한 통치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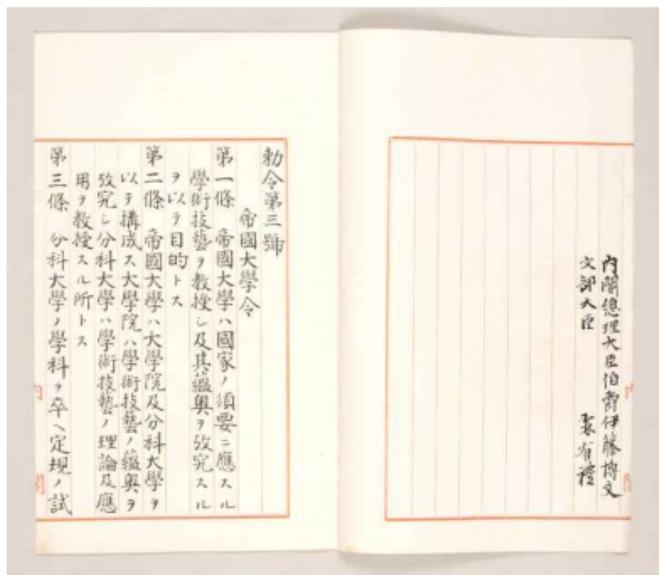
# 1920년대 문화통치,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헤게모니의 추구

- 3.1 운동의 충격: ‘일본의 교육을 받은 현지인 엘리트들이 도리어 3.1운동을 주도했다!’ → 식민지 헤게모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서는 식민통치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 식민 교육정책의 전면수정: 내지 준거주의 → 식민 모국과 같은 교육제도를 적용(교육내용 또한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헤게모니의 추구
- 초등학교(4년제에서 6년제로), 중등학교(4년제에서 5년제로) → 內鮮別學은 유지되지만, 진학교육을 허용. 학력추구를 통한 조선인들의 체제내화를 모색
- 고등교육, 특히 대학의 설립



# 제국대학? 식민지의 제국대학

- 제국대학: 일본 천황의 칙령에 의해 규정되는 관립 종합대학



<제국대학령>(1886)

“제국대학은 國家의 須要에 應하는 學術, 技藝를 가르치고 그 蘊奧를 攷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위한 학술 및 인재창출



- 소수 정예주의를 고수했던 엘리트학교 : 엄청난 경쟁 + 대가로서 특권
- 국가관료를 양성하는 특권적인 인력창출기관 : 실용적 차원의 전문교육
- ‘국가’를 위한 학문을 독점하는 연구대학 : 강좌, 세미나르, 연구중심 편제
- 새로운 지식,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지적 거점 : 엘리트의식과 학문자유



- 식민지와 본토 사이에는

제도, 위상에서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음

1877年 明治19年	設立年	大学名	1947年 昭和22年	大学名	1949年 昭和24年
帝国大学令	1886年 (明治 9年)	東京帝国大学	国立総合大学令	東京大学	新制大学発足
	1897年 (明治 30年)	京都帝国大学		京都大学	
	1907年 (明治 40年)	東北帝国大学		東北大学	
	1911年 (明治 44年)	九州帝国大学		九州大学	
	1918年 (大正 7年)	北海道帝国大学		北海道大学	
	1931年 (昭和 6年)	大阪帝国大学		大阪大学	
	1939年 (昭和 4年)	名古屋帝国大学		名古屋大学	



## 学制による大学区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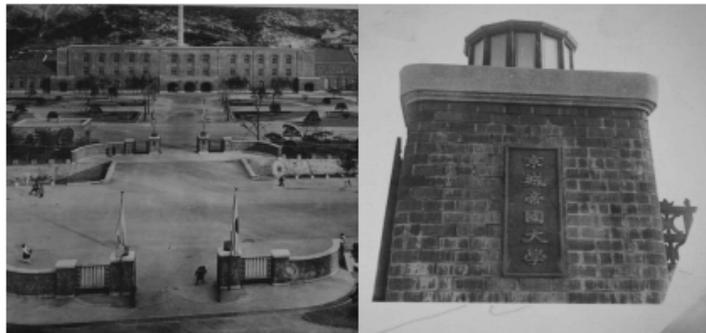
### 旧帝国大学七校

北海道大学 東北大学 東京大学  
名古屋大学 京都大学 大阪大学  
九州大学



## 식민지대학? 경성제국대학 설립의 식민지적 성격

- 대학설립을 추진했던 식민지 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을 저지(헤게모니 경쟁)
- 식민지 조선에 대한 학술지식 생산을 독점, 조선인 지성계를 종속/배제
- 학력경쟁을 통한 식민지 청년층의 체제내화, 유출방지
- ‘동화주의’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 1930년대 내선융합, 자본주의적 시장통합을 통한 헤게모니의 추구

- 소화공황(1930~31)의 충격: 더 이상 고비용의 '제도적 동형화' 정책은 어려움.
- 식민지 조선인의 교육 요구 또한 상당히 강력해지고 자발적이 된 상황(식민지 학력사회의 단초?)
- 교육정책 또한 고등교육의 확충 같은 고비용의 사업보다는 보통교육의 확장을 통해 피식민자들을 자본주의적인 시장질서 속에 통합시킬 필요 → 농촌진흥운동, 간이학교, '노동자형 인간의 양성'(이만규)
-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지원, 방임



# 1930년대 후반 이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헤게모니 전략의 포기 혹은 강제동화

-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인들의 전쟁 동원의 필요성

→ “일본인이 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 빨리 일본인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鍊成].”

- 제3차 조선교육령(1938)

- 1) 조선인 학교의 명칭을 전면 폐지
- 2) 내선별학의 점차적 폐지
- 3) 교과과정에서 조선어과목 대폭 축소

# 동화정책의 급진화? 실은 헤게모니 전략의 포기

# 대학과 관련해서도 자치관행을 부정, 전쟁동원

■ 일제말기의 학제도(1943년 말)



-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주도했던 학무국장의 발언

內鮮融合은 理想이 아니다. 理想은 鮮人の 日本化이다. 그런데, 鮮人の 日本화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그 논거는 골격, 혈액형 등의 인류학, 의학상의 點에서, 기질의 點에서, 또 언어上 우랄 알타이계에 속하고 종교上 샤머니즘에 속한다는 것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인을 支那化한 것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支那化를 벗겨 원래의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日本화는 가능하다. 때문에 일본인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따라서 교육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伊藤獻典(1942), 『鮮滿の興亞教育』, 東京: 目黒書店, 3-4쪽.)

- 조선인에게서 “중국적인 것”을 벗겨내어 그 속에서 일본적인 속살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교육 → 이 시점에서 ‘교육’ 및 거기서 이루어지는 학교는 더 이상 헤게모니의 획득과는 무관한 어떤 것, 그 자체로 우회 없이 폭력적인 장치 그 자체로 변모.

# 전쟁은 얼마간 더 지속되지만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식민지교육은 이 시점에 이미 파탄



## 후기: 해방이후의 과제로서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일본에의 예속상태다!

- 오천석: 한국인들은 36년간 일본적 전체주의 밑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지만, 여전히 “우리 심적 생활에는 일본적인 사상과 사색방법이 굳은 뿌리를 박고 있다.”
- 게다가 400년간 지속되었던 조선적 전체주의도 여전히 문제!
- 다시 말해, “反民主主義 = 專制主義”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식민지배만큼이나 과거의 전통지배도 문제이며, 일본적 전체주의와 조선적 전체주의의 동시 극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
- 게다가 이중적 전체주의가 우리의 ‘전통’이 되어 버린 까닭에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민주생활의 경험이 결여된 상태. 즉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 맡겨 놓아도 스스로를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멸 시키는 결정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일까?” → 해방 직후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딜레마

